보 도 자 료 [통합본]

/대/통/령/직/속/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	ㅇ지역위: 지역개발국 이수호 과장(2180-2226) ㅇ지경부: 지역경제과 김영삼 과장(2180-2225) ㅇ국토부: 해안권 개발과 김규현 과장(2180-2214) 국토정책과 윤성원 과장(2110-8148)

ㅇ 배포일시 : 2010. 4. 20(화)
ㅇ 보도일시 : 2010. 4. 21(수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.
* 인터넷 매체 4. 21(수) 11:4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.

내륙초광역권 설정-혁신도시 활성화-남해안선벨트 실천방안 제시

-(지역위①) **내륙 초광역개발권** 권역설정⇒ 첨단산업-백두대간-대구·광주 등
-(지역위②) **창조지역** 도입과 활성화⇒ 지역 정체성(地格) 부각-지역 브랜드 개발
-(지경부) **지역경제** 활성화⇒ 광역 선도산업발전-지방투자확충-R&D특구 추가지정
-(국토부①) **혁신도시·기업도시**⇒ 5월 공공청사 착공-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격인하
-(국토부②) **남해안선벨트** 종합계획⇒ 경제·물류·휴양허브-2020년까지 24.3조원

◇ **지역발전위원회(위원장 최상철, 이하 지역委)**는 '10.4.21일(수)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개최된 **제7차 지역발전위원회**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·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지난 2년간의 지역정책 성과를 점검**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보고

ㅇ이날 **지역委**는 ▸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를, 그리고 **지식경제부**는 ▸지역경제 주요현안 및 대책, **국토해양부**는 ▸혁신도시·기업도시 활성화 방안과 ▸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(안)을 각각 보고 (***세부내용: 붙임 참조**)

◇ **지역委**는 특히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4개 초광역벨트(동·서·남해안벨트·남북접경벨트)에 이어 내륙 산업·문화·공유자원을 연계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**내륙 초광역개발권** 권역을 설정키로 하는 내용 보고

ㅇ**내륙첨단산업벨트**(원주-충주-오송-세종-대덕-전주), **백두대간벨트**(태백·설악산권-소백산권-덕유산권-지리산권), **대구-광주 연계협력**(R&D중심 영·호남 대표거점의 동반발전) 등 3개 지역에 대해 향후 일부 중복지역의 조정 등을 거쳐 **권역을 확정**('10.상반기)하고 **기본구상**('10.6~9)을 마련한 후 **종합계획**('10.12)을 수립 예정

◇ 지역委는 또한 지자체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주안을 두기로 했으며, 향후 **우수사례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** 예정

◇ 지역委는 이와 함께 **地格 제고와 지역브랜드 개발**을 통한 **차별화된 지역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「창조지역 기본구상」을 마련**

ㅇ특히, 지역시책의 획일·전례답습적 사업추진 관행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자구적·창조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 인상 등의 **인센티브 부여 추진**

◇ **지경부**는 선도산업을 육성, **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역에서 좀 더 체감**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▸시·도 전략산업의 효율적 개편 ▸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▸산업단지 구조고도화(시범: 반월·시화, 남동, 구미, 익산) ▸R&D특구(대구·광주) 연내 추가 지정 등 5개 주요과제를 제시
※지방투자 보조금 실제수요('11년 2,000억원)를 고려, '11년 예산 증액 추진

◇ **국토부**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토해양 인재개발원을 착공(5월)을 비롯, 올해 안에 **30여개의 이전 공공기관 청사를 착공**하고, 부지공사도 올해 말까지 공정율을 55%(현재 26%)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

ㅇ혁신도시(10개)는 원형지 등을 세종시 수준으로 공급하고, 입주할 민간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에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, 이들이 입주하는 **산학연클러스터용지 가격을 평균 16% 인하**하고, **혁신도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선채용**도 강구

ㅇ아울러 **기업도시(6개)는 민간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**하고, 정부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▸원형지 공급 ▸입주기업 종사자용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**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**

◇ **국토부**는 또 이번에 **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**을 보고, 2020년까지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·휴양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·물류 거점 육성하는 등의 중장기 발전구상을 제시(앞으로 **166개 세부사업에 총 24.3조원(민자포함)을 투자**)

ㅇ이번 종합계획은 부산·전남·경남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**자율적으로 입안**하고,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**상향식 계획**인 점에서 의미가 큼

ㅇ정부는 해안권위원회(위원장: 총리)의 심의를 거쳐 **'10.5월초 동 종합계획을 확정**하고,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
※동·서해안 및 접경권 종합계획은 5월 말까지 확정

《 참고 : 부처별 안건 담당자 》

※ 지역발전위 : (내륙초광역) 지역개발국 이수호과장 02-2180-2226

(창조지역) 지역개발국 김도형 과장 02-2180-2225

※ 지식경제부 : (지역경제 현안·대책)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영삼 02-2110-5591

※ 국토해양부 : (남해안선벨트) 해안권개발과장 김규현 031-436-8710

(혁신·기업도시) 국토정책과장 윤성원 02-2110-8148

《 붙 임 : 안건별 보고내용 》

1. 지역委 보고내용(5쪽) - 지역발전정책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
2. 지경부 보고내용(5쪽) - 지역경제 주요 현안·대책
3. 국토부 보고내용①(5쪽) - 혁신도시·기업도시 활성화
4. 국토부 보고내용②(5쪽) -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

※ 부처 보도자료(총3건) - 지경부 (1건), 국토부(2건)

붙임 1 [지역委 보고내용]

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

2010. 4. 21.

< 목 차 >

Ⅰ. 보고 배경 / 1

Ⅱ. 지역발전정책 추진성과 / 1

Ⅲ.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정책성과 제고 / 3

Ⅳ. 중점 추진과제 / 4

1.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설정 및 개발
2. 지자체간 연계·협력사업 추진
3. 창조지역 도입과 활성화
4. 2010년 추진과제 및 주요행사

지역발전위원회

Ⅰ. 보고 배경

□ **(패러다임 대전환)** 종래의 '나눠먹기식 지역개발'에서 '**상생발전과 광역화**를 통한 지역발전'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□ **(정책 환경)**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타 지역의 역차별 정서,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개발 요구의 폭발적 증가 등 쟁점 발생

□ **(정책 방향)** "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" 실현(대통령 국정연설)

※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,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창출 가속화

Ⅱ. 지역발전정책 추진성과

◇ **"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"**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의 기틀 정립

< 패러다임 대전환 >

패러다임	광역화 (규모의 경제)	특성화 (선택과 집중)	분권화 (지자체 중심)	상생발전 (연계·협력)
	⇩	⇩	⇩	⇩
	행정구역 단위 분산투자	특색없는 획일적 개발	중앙 주도 하향식	대립과 갈등

1 3차원(광역·기초·초광역)의 지역발전체계 정립

□ **5+2 광역경제권 :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특화발전**

○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립과 30대 프로젝트 등 광역 사업 추진

□ **163 기초생활권 :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**

○ 163개 시·군 자율로 **기초생활권 발전계획** 수립('10.2)

※ 살고있는 지역의 개발비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전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수계획 시상 및 「한눈에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」을 발간

□ **4+α 초광역개발권 :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국가간 지역개발 협력**

○ 동서남해안 및 접경 벨트: 기본구상 발표('09.12) 후 종합계획 수립중

○ 내륙권(α) : 지자체 제안내용을 토대로 내륙특화벨트 선정

2 경제위기 극복, 국토 재창조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추진

○ 마스터플랜을 확정('09.6)하여 95개 신규사업 추진

- 본사업('11년 완료) : 4대강 본류의 하천정비, 농업용수, 수질개선
- 직접 연계사업('12년 완료) : 섬진강과 주요지류의 하천정비 등
- 연계사업 : 부처별 수변 복합공간 창조(문화부, 환경부, 국토부 등)

3 국가 및 지역 신성장거점 구축

○ **세종시**를 **교육·과학중심 경제도시**로 육성하는 방안 제시

○ **첨단의료복합단지** 계획 확정과 **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** 조성 추진

○ **새만금** 명품 수변도시(아리울시) 건설 등 **종합실천계획** 마련

○ **혁신·기업도시**의 관련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**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** 추가 지정(경제자유구역 3개, 국가산업단지 5개)

4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

○ **지방 소득·소비세***를 신설하고,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

* 매년 1.9조원 이상의 재원이양 효과,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

○ **포괄보조금** 제도 도입 (200여개 세부사업 → 24개 포괄사업으로 통합)

○ **지역상생발전기금** 신설 (향후 10년간, 총 3조원)

○ **지방 이전기업 보조금** 확대 등으로 지방산업 지원

○ 중앙의 **인·허가권***을 지자체로 이양

*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,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 등

⇒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, 지방의 기업창업 등이 활발

- 비수도권 창업기업(제조업) 수(개) : ('07년) 4,949 →('08년) 4,971 →('09년) 6,257
-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수(개) : ('08~'09년간) 957

Ⅲ.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정책성과 제고

◇ 지난 2년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효과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나, 정책 현장에는 **아직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**들이 만연
⇨ 지역발전 정책의 **성과 창출**이 **가속화**되도록 개선방안 적극 강구

1 지자체의 자조적 발전보다 **중앙 의존적 관행** 잔존
⇒ 지방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
⇒ 지방지원사업 총람·매뉴얼 제시, 지자체 자율기획 유도

2 **행정구역에 집착한 소지역 이기주의적 개발**
⇒ 지자체간 연계·협력 모범사례 확산
⇒ 연계·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확대

3 부처간, 부처내, 회계간, 중앙과 지방간 **유사·중복사업 존재**
⇒ 범부처 유사·중복사업의 점검·조정체계를 강화
⇒ 단위사업별 관리를 지역공간별 종합관리체계로 전환

4 컨텐츠 없는 **H/W사업 시설 유휴화, 유지관리비 과다**
⇒ 신규 H/W 사업 추진을 가급적 억제
⇒ 기존 시설 활용 및 리모델링 사업에 우선 지원

5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**획일적 붕어빵식 개발**
⇒ 지역 특화적인 맞춤형 개발 컨설팅을 지원
⇒ 창조지역 도입과 활성화

6 사업결과에 대한 **책임성 부재**와 **인센티브 제도의 미비**
⇒ 지역사업 평가를 강화하고, 인센티브 확대와 페널티 강구

Ⅳ. 중점 추진과제

1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설정 및 개발

1 **(추진배경과 경과)** 해안권 및 남북접경벨트 등과 내륙 산업·문화·공유자원을 연계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**내륙 초광역개발권** 설정

2 **(권역설정안)** 지자체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권역을 확정('10.5)한 후 기본구상 수립('10.6~9) 및 종합계획 마련('10.12)

○ **(내륙첨단산업벨트)** 원주~충주~오송~세종~대덕~전주 구간을 연계, IT·BT 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·백제 문화권 관광지대 육성

○ **(백두대간벨트)** 한반도의 대표적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휴양·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·역사·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

○ **(대구-광주 연계협력)** 의료·광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구·광주의 R&D 특구를 상호 연계하여 영·호남 대표거점으로 개발

2 지자체간 연계·협력 사업 추진

1 **(추진배경)** 지역개발 사업을 **광역화**함으로써 **시너지 효과**를 극대화하여 **지역 이기주의 극복**

2 **(추진계획)**

○ **(광역경제권)** '10년 우수 연계·협력 사업을 선정('10.4), 국비(540억원) 지원

○ **(기초생활권)** 163개 시·군의 「기초생활권 발전계획('10~'14년)」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·협력 사업중 우수사례를 선정·지원

○ **(초광역개발권)** '10년 초광역 연계·협력 시범사업 지원(국비 90억원)

3 **(전파·확산)** 연계·협력 우수사례 및 정부의 인센티브 내용 홍보

3 창조지역 도입과 활성화

1 **(추진배경)**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살린 **'살고 싶은 지역개발'** 필요

○ 획일·전례답습적 사업 관행을 극복하고 **자구적·창조적 노력**을 점화

2 **(추진전략)** 수도권을 포함, 시·군 단위 추진 후 **점차 광역권으로 확대**

○ 문화도시, 유교·신라·백제·가야·선비문화권 등 창조적 사업 발굴

○ 지역위는 교육·컨설팅을 통해 창조지역 사업개발을 지원

3 **(실행방안)**

○ 지자체별 포괄보조금으로 자율기획하여 시행토록 유도

○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

4 2010년 추진과제 및 주요행사

< 추진과제 >

① 동·서해안 및 접경벨트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 수립 ('10.5)

② 국가 농어촌정책과 도시정책의 기본틀 정립 ('10.6)

③ 분권적 지역발전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('10.6)

※지역발전종합센터 설립(안): 유사기능을 통합, 지역홍보·공연·판매·투자유치를 위한 종합공간

④ 광역경제권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('10.9)

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SOC 정책방향 마련('10.12)

⑥ 시·도별 201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지시한 과제들의 이행·관리

< 주요행사 >

① 신규 선출되는 지방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(6.2 지방선거 이후)

② 초광역(동북아) 국제컨퍼런스('10.7), 지역발전 박람회('10.9)

③ 전국 시장·군수 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('10.10)

붙임 2 (지경부 보고내용)

MKE 지식경제부

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

2010. 4. 21.

지 식 경 제 부

목 차

Ⅰ. 최근 지역경제 동향과 과제 ····· 1

Ⅱ.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····· 2

1.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····· 2

2. 시 · 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 ····· 3

3.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····· 4

4. 기업입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····· 4

5.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····· 5

Ⅰ. 최근 지역경제 동향과 과제

□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는 전체적인 성장 회복 기조와 동일하게 작년 1분기 바닥을 지나 빠르게 회복 중

○ 지방의 **수출 · 생산** 등 실물경제 지표들은 **작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**하였으며, 지역기업들의 **경기 전망도 호전**

* 지방 수출증가율(%) : ('09.1Q) △25.5 → (2Q) △21.4 → (3Q) △19.6 → (4Q) 9.8 → ('10.1~2月) 26.7

* 지방 제조업생산증가율(%) : ('09.1Q) △16.1 → (2Q) △6.5 → (3Q) 5.0 → (4Q) 17.5

* 지방 제조업 BSI : ('08.4Q) 57 → ('09.1Q) 47 → (2Q) 72 → (3Q) 85 → (4Q) 91 → ('10.1Q) 91

* 지방 설비투자 BSI : ('08.4Q) 89 → ('09.1Q) 84 → (2Q) 92 → (3Q) 97 → (4Q) 99 → ('10.1Q) 101

□ 현 정부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진흥 체계를 '광역경제권 중심'으로 전환

○ **'5+2 광역경제권'**을 설정하고, 광역권별 **선도산업(12개)**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**정책의 효과성을 제고**

○ '광역화'와 연계하여, **시 · 도 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**에 대한 지원을 **지난 3년간 약 30.5% 확대**

* 시 · 도 단위 사업 지원(억원) : ('07) 11,446 → ('09) 14,714 → ('10) 14,938

□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 필요

○ 4대강 살리기, 30대 선도 프로젝트, 여수 EXPO 등 대형 지역 투자로 조성된 **투자 분위기**를 **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**시킬 수 있도록 **범부처적 노력을 경주**하고,

○ 금년이 **'지역경제 발전의 轉機'**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정책을 **지방기업과 成果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**해 나가겠음

Ⅱ.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

1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

1 선도산업 사업화 촉진으로 新성장동력을 조기에 창출

○ 3년內 사업화를 위한 **제품화 로드맵**을 수립('10.4月)하고,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**R&D의 내용과 개발속도를 항시 점검**

○ 우수한 R&D 과제에 대한 **인센티브를 확대**(20% → 40%)하고, 미흡과제는 조기 탈락, **우수과제는 중점 지원**

2 선도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

○ **신용보증 우대**(보증료 0.1%p 감면) 및 **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강화**

○ 외국인투자에 대한 **현금지원 및 임대료 감면*** 추진

* 현금지원 운용 요령(지경부장관 고시)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

○ R&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**신성장동력펀드*** 및 **지방기업투자펀드****의 **광역권 단위 활용** 추진

* 녹색성장 · 첨단융합 · 바이오 등 3개 분야 5개 펀드(7,075억원) 조성

** 중기청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(총 15개, 2,910억원 조성)

3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선도산업의 고용 창출력 강화

○ 선도산업 기업이 인재양성센터 4학년생을 **인턴으로 활용**하고, 직원 채용 시 **R&D 사업비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**

* 연간 100억원 규모로 약 500명의 예비 고급인력 고용 가능

○ '선도산업 인력개발 협의체'를 운영, R&D 기획 단계부터 **기업 주도 · 대학참여 방식의 인력양성 전략** 수립 · 추진

2 시 · 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

◈ 시 · 도 단위의 산업발전 기반이 획기적으로 정비됨에 따라, 시 · 도형 사업은 **재정지원 확대 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**으로 전환

* 광역사업 對 시도사업 지원 비율 : ('09) 22.8 : 77.2 → ('10) 41.6 : 58.4

◈ 1단계('10~'11년)로 **지역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**하고, 2단계('12년 이후)에는 지역에 **특화된 산업 발전을 스스로 추진하는 시스템** 준비

1 1단계('10~'11년) :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

○ 지자체가 특화된 발전에 **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 가능**케 하고, **계획 수립 및 평가 권한을 부여**하여 성과경쟁을 유도

○ 유사 프로그램을 **기능 위주로 통폐합***하고, 기술개발 · 마케팅 · 디자인 등 **S/W 지원을 확대**(65% → 70% 이상)

* R&D 사업 통폐합 : (기존) 5개 유형 → ('10) 2개 유형(자유공모, 과제지정)

* 기업지원서비스 조정 : (기존) 164개 사업 → ('10) 113개 사업 (△31.1%)

○ **TP를 중심**으로 지역소재 R&D 기관의 **협력 관계를 강화**하고, 시 · 군 · 구 **특화산업 진흥에 주도적 역할** 수행

2 2단계('12년 이후) :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특화발전을 추진

○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**비전을 제시**하고, 적합한 **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쟁 체제**로 전환(bottom-up 방식)

* 중앙정부는 컨설팅 · 평가 ·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**지역간 경쟁을 유도**

○ 시 · 도가 지역산업 거점기관(TP 등)을 **자율적으로 선정**하고, 관련 기관의 **역할 분담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운용 시스템**을 구축

* 중앙정부는 지원기관 운영 · 관리 · 감독 권한을 **지자체로 이양**하기 위한 **제도개선 추진**

3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

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보조금 확대 · 개편

○ 기업 · 지자체의 **실제 수요**를 고려하여 **'11년 예산 증액 추진**

* 지방공장 신설 추가 지원 및 특화분야 등에 대한 집중 지원 고려 시, 내년도 약 2,000억원의 보조금 지원 수요 예상

○ 지방이전 · 고용 보조금을 **통합**하고, **지방공장 신설기업**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(금년말까지 개편안 수립)

2 지역內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선 지원

○ 부지매입 보다는 **시설투자 · 고용 지원을 강화**하고, **낙후지역 투자기업, 집적화 기업군(群)** 등에 대한 **차등 지원을 확대**

4 기업입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

1 구조고도화 · 新산업 입주 확대로 산업단지의 생산성을 향상

○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 산단 **구조고도화 시범사업** (4개 산단 : 반월 · 시화, 남동, 구미, 익산)**을 하반기에 착수**

* 사업시행자 확대(민간출자 SPC), 토지소유자 대행개발, 사업절차 간소화 등 구조고도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('10.7月)

○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* 추진을 위한 **재원확보 방안 마련**

* 도로, 주차장, 녹지 · 공원, 공동구(전선지중화), 오염물질 공동처리시설 등

○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, **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**을 단계적으로 확대*

* '10년 하반기 수도권 소재 국가산단 2개, '11년 중 지방 소재 국가산단 3개 지정

2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○ **매년 기업의 입지만족도 조사 · 공표**로, 시 · 도의 **서비스 경쟁** 유도

* 노사관계, 지원 인프라(도로 · 주차장 · 녹지 등), 공장설립 지원 등

* 조사설계(5月), 조사실시(6~9月), 조사결과 분석(10~11月) 및 발표(12月)

○ **기업 입지패턴 변화 및 수요를 조사**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입지정책 수립

* 전문가 T/F 구성(5月), 조사 실시(6~9月) 및 정책방향 수립(12月)

○ **휴 · 폐업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**하여 기존 용지의 활용도 제고

○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용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**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** 구축

* 시스템 시범 운영 후 전국적 확산 추진('10.10月)

5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

1 대덕특구는 국가 R&D 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

○ **대덕의 성과창출 제고 방안***을 마련하고, **세종시 ·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의 연계**를 통해 R&D 성과의 파급효과를 제고

* 고급기술 활용 방안, 특구 내 기술사업화 촉진, 성과 파급방안 등

2 연구개발특구의 추가 지정 추진

○ R&D · 산업화 역량을 겸비한 **광주 · 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**

* '광역권內 R&D 허브'로 활용, R&D 성과의 지역 확산을 활성화

○ 민간전문가 자문단 및 추가지정 T/F 구성 등을 통해 **'10년 중 특구 동시지정을 목표**로 행정절차를 추진

붙임 3 (국토부 보고내용①)

혁신도시 ·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

2010. 4

< 목 차 >

Ⅰ. 추진배경 / 1

Ⅱ.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/ 1

Ⅲ.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/ 4

Ⅳ. 향후 주요일정 / 5

국 토 해 양 부

Ⅰ 추진 배경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중

□ 세종시 발전안 발표이후 혁신도시·기업도시 등에 대한 **보완방안***을 추진중이나, 아직도 역차별 논란 및 사업추진 의구심 잔존

* 원형지 공급 확대,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 등

○ 의구심 해소와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「혁신·기업도시 활성화 방안」 추진

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

1. 혁신도시 추진현황

○ **(사업개요)** '12년까지 **157개 공공기관을 이전**하고, 전국에 **10개 혁신도시**를 건설하여 '20년까지 산·학·연 클러스터를 구축

* 혁신도시 총 면적 4,522만㎡, 계획인구 27.4만명(공공기관 직원 39,000여명)

○ **(추진현황)**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**차질없이 추진중**

- 157개 이전대상기관중 **128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**(82%)
- **한전 등 36개 부지매입, 석유공사 등 40개 기관 청사설계중**
- **보상 마무리**(99.2%), 모든 혁신도시 **공사 진행중**(공정률 28%)

○ **(녹색청사 건축)** 에너지 사용 50%절감,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10%까지 확대

* 「혁신도시 저탄소 에너지절약 청사설계지침」 제정('10.1)

2.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

◈ '12년까지 차질없이 **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**
◈ **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**

1 이전기관 청사설계·부지매입 연내 완료하고, 상반기부터 착공 추진

○ **(이전계획)** 29개 미승인 기관중 9개는 5월중 승인, 나머지도 조속히 승인

○ **(부지매입)** 「**정부소속기관**」이 선도하여 **5월중 11개 기관이 부지매입**, 나머지 19개 기관은 **연내 매입**(정부소속기관 47개중 기매입 17개)

- 정부투자·출자기관 등 61개 기관은 **연내 매입 추진**

* 정부소속기관외 총 110개 기관중 기매입 19, 임차대상 30, 연내매입 대상 61개

○ **(착공) 5월중 국토해양인재개발원** 착공 등 **연내 30여개 기관 착공**

* 혁신도시별로 지자체·이전기관·사업시행자 등으로 「혁신도시 건설협의체」를 구성하여 공사비절감, 공기단축, 에너지절약 청사 건축 등을 위해 협력

○ **(이전재원 마련) 연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**

* **(대책)** ① 종전부동산 매각활성화 : 로드쇼 등을 개최(6월중), LH 및 지자체 매입 독려
② 자체 추경편성, 차입시 利差 지원, 차입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등

○ **(점검체계 구축) 범정부적**으로 철저히 **이전상황 점검·독려**

- **지역위 주관**으로 관련 부처 합동 「**지방이전 추진점검단**」 **구성·점검**
- 추진실적을 「공공기관 워크숍」 등에 보고

* 「공공기관 경영평가」에 추진실적 반영 검토

2 혁신도시 부지조성을 금년말까지 55% 달성 ('11. 85%, '12. 100%)

○ 공정이 늦은 **충북·전북**은 집중투자·Fast-Track 방식으로 **부진 만회**

3 「산학연클러스터 구축」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

○ **(지자체 역할·기능 강화)** 지자체는 투자유치 기업·대학 등에 **저렴한 용지 등을 공급**, 교육·주거 등 **정주여건 조성**

- 소규모 이전기관 또는 임차청사 기관에 **합동청사*** **건축·임대**

* 합동청사 입주대상 : 임차청사 입주기관(30개), 100명 이하 소규모 기관(24개)

○ (「**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**」 **활성화**) 기업 등 투자유치, 이전기관 지원사업 이외, 투자기업 등의 각종 인허가 절차 **One-Stop 서비스** 제공

- 「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」 국고지원(연 20억원) 지원방식 조정(일률적→실적별)

○ **(기업유치)** 지자체는 벤처빌딩,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지원, **이전기관**은 물품구매·용역·공사발주시 **혁신도시內 기업**에 **가점 부여**

○ **(대학·연구소 유치)** 지자체는 이전기관 연관 지방대학 학과설립 지원, 이전기관은 **혁신도시內 관련학과 졸업생 우선채용** 및 **R&D 예산 우선지원**

4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격 추가 인하

○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**분양가 인하 및 자족용지 확대** 추진중

- 분양가 인하(14.3%), 자족용지 확대(244→338만㎡)

○ **추가로,** 공원·녹지 조정 등을 통해 **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한하여 가격인하***(평균 16%)

* **(인하효과)** 광역시내 지역인 대구·울산 18% 인하(290만원→240만원/3.3㎡)
이외 중소도시지역 7개 지역 14% 인하(150만원→130만원/3.3㎡)

Ⅲ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

1. 기업도시 추진현황

○ **(사업개요)**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전국에 **6개 시범도시**를 선정하여 추진중

* 기업도시 총 면적 11,714만㎡, 계획인구 24.3만명

○ **(추진현황) 충주, 원주, 태안** 등 3개 기업도시는 **차질 없이 진행중이며** 작년말 **용지분양을 개시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**

* 충주는 1차 분양(분양대상 면적의 40%) 결과 91% 분양률 달성 ('09.12)
원주, 태안은 입주예정 업체와 MOU 체결(원주 12개, 태안 5개 기업)

- **나머지 3개 도시**(무안, 무주, 영암·해남)는 **금융위기** 등 **경기침체**에 따라 **사업성 악화 및 자금난**으로 사업 부진

* 무안('09.1), 무주('07.9), 영암해남 4개 지구 중 2개 지구(삼호, 구성) 개발계획 승인

2.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

1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**제도 개선 지속 추진**

○ **원형지 공급 활성화 및 공공주택 특별공급** 등

2 입주기업에 대한 **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**

○ **지자체, 시행자 등이 참여**하는 **지원협의체를 구성**하여, **기업도시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** 및 **기업 애로사항 해소**

○ 학교·주민센터 등 **공공시설의 조기설치**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고, 기업 입주시기에 맞춰 **주택·인력 등 공급방안** 강구

3 기업유치 및 분양활성화를 위한 **마케팅·홍보활동 강화**

○ 기업도시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**홍보관 건립 및 설명회 개최**

○ 시행자·지자체 공동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**1:1 맞춤마케팅** 추진

4 **부진한 3개 기업도시는 조기활성화 유도**

○ **(무안) 민간투자자의 PF 참여를 유도**할 수 있도록 **개발계획을 변경 추진**(개발구역 축소 등 검토, 국토부)

○ **(무주)** 개발규모 축소 조정 후 정상화 방안 마련(문화부)
- 사업시행자 대체지정 방안도 검토 중

○ **(영암·해남) 4개 지구**(삼호·구성·삼포·부동)에 대해 **조기착공 독려**(문화부)
- 공동시행자로 참여중인 전라남도가 적극 지원 중

Ⅳ 향후 주요 일정

□ **혁신도시 주요 일정**

○ 지방이전추진점검단 구성·운영 : '10. 4월~

○ 청사 신축 착수 : '10. 5월~

○ 청사 설계·부지매입 완료 : ~'10. 12월

□ **기업도시 주요 일정**

○ 기업유치방안 강구 : '10. 4월~

○ 부진도시별 지원방안 마련 : '10. 4월~

○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: ~'10. 6월

붙임 4 [국토부 보고내용②]

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(안) 요약

2010. 4

< 목 차 >

Ⅰ. 종합계획 개요 / 1
Ⅱ. 비전 및 미래상 / 2
Ⅲ.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 / 3
Ⅳ. 집행 및 추진방안 / 5
Ⅴ. 향후 추진계획 / 5

국토해양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문화체육관광부, 지식경제부, 환경부
부산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남도

Ⅰ 종합계획 개요

1 추진배경

○ 남해안권은 **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**으로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발전여건이 우수하여 **초광역개발*의 선도지역**으로 추진

* 광역권간 상생발전 및 개방형 국토개발을 위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('09.12)

○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현실화하고 **지자체간 연계·협력**을 통해 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* 필요

* 부산, 전남, 경남의 공동입안('09.9)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(안)을 마련

2 대상 및 범위

○ **(지역)** 부산, 전남, 경남의 해안선에 연접한 **35개 시·군·구**(12,753㎢)

○ **(기간)** **2020년**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계획

○ **(내용)**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**기본전략**, 관광·산업·물류 등 부문별 **발전방향** 및 **하위계획의 수립지침** 등을 제시

3 지역여건 분석

○ 세계적 **리아스식 해안**(8,425㎞)·**다도해**(2,546개 섬) 등 최적의 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여 **국제적인 체류형 휴양·관광허브 육성**에 적합

○ 조선(전국의 56.5%), 석유화학(39.7%), 기계(37.3%) 등 **기간산업이 집적**되어 있어 **산업간 융복합**을 통한 **미래 신산업** 창출이 가능

○ **내륙과 해양의 연결 관문**으로 거점 물류항만(전국 물동량 45.4%)을 보유하는 등 **국제 해양물류·교통 중심지**로의 발전 기대

○ 영호남을 아우르는 **한반도의 U자축 중심지**에 위치하여 **동·서 통합 및 지역 상생발전**을 선도하는 역할 부여

Ⅱ 비전 및 미래상

1 비전 및 목표

비전 : 새로운 경제·물류·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

목표
-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
- 새로운 국토 성장축 형성
-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

추진전략
① 세계적 해양 관광·휴양지대 조성
② 글로벌 경제·물류거점 육성
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
④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거점 육성

2 미래상

○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남해안 3개 시도는 **2020년에 인구 870만명, GRDP 240조원**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

* '08년 대비 인구는 현행 유지, GRDP는 184→240조원

○ **동북아의 5위 경제권**으로서 국제교류·신산업·관광의 중심지대로 도약하고 해양중심의 개방적 국가발전을 선도

* '08년 대비 3개 시·도의 제조업 총생산액 183%(59조원→108조원), 총물동량 166%(517백만톤→857백만톤), 외국인 관광객 192%(233만명→447만명) 예상

Ⅲ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

전략 1. 세계적 해양 관광 · 휴양지대 조성

○ 수려한 자연 자원을 활용·연계하여 **주요 권역별**(한려수도권, 다도해권, 남도문화권, 도심형관광권)로 특색있는 **관광·휴양 클러스터**를 조성

○ 해상영웅(이순신 등)/남도문화(어촌체험, 문학작품 등)/생태자원(습지·공룡화석지 등) 등 지역의 독특한 주제를 연계한 **테마 관광벨트**를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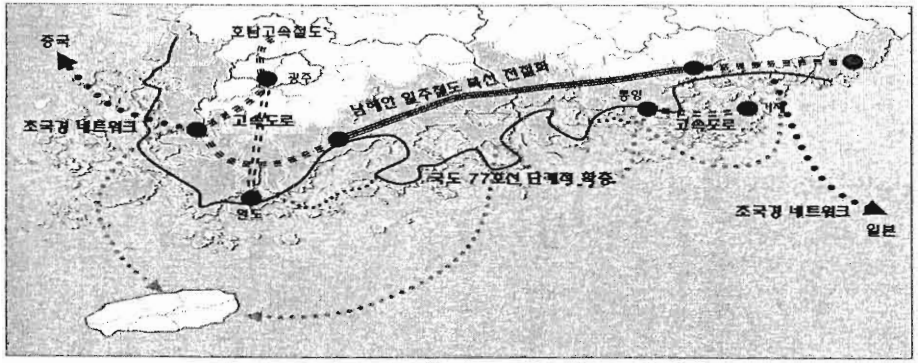
○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**기반시설**(부산, 여수 등)을 확충하고 관광거점별로 해양레포츠를 위한 **마리나 항만**을 조성

전략 2. 글로벌 경제 · 물류 거점 육성

○ **조선**(부산, 고성, 신안) 등 집적된 전략산업을 **고부가가치화**하고 **항공우주**(사천, 고흥)·**핵과학**(부산)·**해양바이오**(완도) 등 **미래신산업**을 창출

○ 남해안을 **동북아 물류항만 거점**으로 구축하기 위해 **부산·광양항**의 기능을 복합화·고도화하고 **노후항만**(여수·통영 등)을 **관광미항**으로 정비

전략 3.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



○ **남해안 일주 철도·도로** 및 **내륙연계 교통망**(광주~완도, 통영~거제)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**통합생활권**을 구축

○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**국제교류 기본계획** 수립, **제주도** 연계 **관광자원화 프로그램** 개발 등 초국경·광역경제권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

전략 4.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

○ 향후 남중권을 **남해안의 중추거점**으로 육성하고, 우선 문화중심의 **섬진강 테마로드** 조성, **연륙교** 검토 등 동서통합·지역상생 기반 구축

○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위해 **여수신항 주변 정비**, **서상항 페리 터미널**(남해) 및 **신월 관광단지**(여수) 등을 조성

○ 혁신·기업도시, 경제자유구역, 국가산단 등 남해안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역별 특화 성장거점 육성

Ⅳ 집행 및 추진방안

1 총사업비 및 파급효과

○ 2020년까지 166개 사업, **총 24.3조원**(민자포함)을 투자할 계획으로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

○ **생산유발효과 48조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 20조원, 일자리 22만개 창출**

2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

○ 사업절차 간소화 등 **해안권특별법**을 **개정**('10.3)하고 **자연공원, 수산자원보호구역** 조정 등 **규제합리화**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('10년 중)

○ 중앙에 범정부적 지원 T/F, 지방에 지자체간 협의회 등 **상호 협력적 거버넌스**를 구축하고, 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등 **홍보·마케팅**도 강화

○ **친환경개발**을 원칙으로,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개발수준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**「해안경관 가이드라인」**을 마련

○ 사업추진의 **조기 가시화**를 위해 중앙·지방이 협조하는 **협력사업***과 지자체가 우선 시행하는 **시범사업****을 발굴하여 금년 중 착수

* 협력사업 :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, 남해~여수간 연안뱃길, 경관조망공간 설치 등
** 시범사업 : 부산 가덕도, 전남 진도 팽목항, 경남 거제 지세포 종합관광휴양지대 조성

Ⅴ 향후 추진계획

□ **해안권위원회**(위원장 총리)의 **심의**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('10.5초)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

* 동해안 및 서해안권은 지자체 입안('10.4말)을 거쳐 '10.5중 종합계획 확정

□ 금년중 **협력사업**은 **지역선정·실시설계** 등을 착수('10.4)하고 **시범사업**은 **개발계획 승인** 추진('10.10)